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영리**

이숙중***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설계 | |

〈요 약〉

본 연구는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갈등과 이익·가치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신뢰는 이념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신뢰는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는 이익·가치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연대감을 높여주는 사회신뢰가 강할수록, 표출적이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정치참여가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신뢰하면 이념갈등에 따른 참여는 줄어들고, 이익 및 가치갈등에 따른 참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시민들이 정부를 이념갈등의 중재자보다는 이익이나 가치갈등의 조정자나 해결자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사회갈등, 주장형 정치참여, 정부신뢰, 사회신뢰,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6 S1A3A2924832). 아울러, 본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성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lee.youngri.0304@gmail.com)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skjlee@skku.edu)

논문접수일(2018.4.23), 수정일(2018.6.12), 게재확정일(2018.6.21)

I.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며, 사회갈등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은 편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6).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2009년~2013년 연평균 사회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는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높은 수준의 갈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특히 주목해 왔다. 현대경제연구원(2016)의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갈등 지수가 상승하면 1인당 GDP가 하락하며, 반대로 사회갈등을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한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갈등이 초래하는 커다란 비용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는 것일까? 사회갈등은 그 사회가 역동적이며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서문기, 2004)으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난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개인 간, 집단 간 사회갈등이 자연스럽게 노정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처럼 이러한 갈등 표출을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주진(2010)은 사회갈등을 긍정적인 사회발전의 과정인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조대엽(2014)도 사회갈등을 신자유주의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제거하려기보다, 사회갈등을 제도적 수준으로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사회이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해지고 이념과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공공정책적 요구가 커지며,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자의 사회갈등의 경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집단들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조정을 통해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간다. 후자의 공공갈등의 경우는 정부의 대응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곳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한다.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1987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체제이행을 한 이래 한국 사회는 역동적 시민사회에 의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역동성은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적극

적으로 표출하고 해결하려는 데서 기인하는 바, 한국 시민들은 이를 집회 참여, SNS 상의 의견 개진, 서명운동 등과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행위를 통해 보여왔다. 이러한 역동성은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커도 갈등 표출이 낮은 일본사회와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동아시아 갈등협력 국제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의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10점 기준 4.94점으로 한국의 5.77점에 비해 낮아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에도, 정치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로 한국의 37%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사의 노사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 유형별 갈등 수준 인식의 평균이 한국은 61.9%, 대만은 69.9%로 대만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대만은 51%로 한국보다 14%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일본은 민주주의 실현에 불만이 커도 정치참여를 잘 하지 않으며, 대만은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높아도 정치참여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정치참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사회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징을 가진 사회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시민들의 시위, 집회 등의 정치참여는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영향을 받는다(홍혜승·류은영, 2015). 또한, 신뢰는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 사회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Putnam으로 대표되는 대개의 사회자본론자들은 신뢰가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증진시켜 협력적 행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연구해 왔다. 사회자본론자들이 협력과 연대를 가져올 것으로 주장하는 신뢰는 주로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 즉, 사회신뢰이다. 이는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신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문제시하는 사회갈등이 촉발하는 참여는, 대개의 경우 주장형 정치참여가 많으므로 정치제도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 즉 정부신뢰가 없을 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갈등과 정치참여의 관계 사이에서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은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과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의 관계에서 신뢰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구분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신뢰와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시민들 사이에 협력하여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신뢰와 주장의 대상이 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의 경우 서로 상반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갈등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과 이 과정에서 신뢰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시민들의 사회갈등 인식 정도가 주장형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갈등과 시민들의 정치참여 관계에 있어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어떤 방향의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의 의미를 정치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진전의 차원에서 되짚어 보고, 사회갈등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있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서로 다른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의 관계

1) 사회갈등

갈등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행위주체 사이의 적대적 관계 및 적대적 행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정건화, 2007), 권력과 지위, 자원이 희소한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 간에 발생하며, 특히 민주적인 사회에서 갈등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김진호, 2007).

사회갈등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간 합의되어 있지 않아 매우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다(Susskind, 1999: 이진, 2015 재인용). 사회갈등은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요인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로, Coser(1956)는 사회갈등을 양립불가능한 것에 대한 싸움과 희소한 자원 및 재화 등에 대한 욕구를 둘러싼 투쟁으로 보아,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고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이라고 이야기한다. Schmidt와 Kochan(1972)는 목표의 양립불가능성(incompatibility), 상대방의 목표추구를 방해하는 행동, 자원의 공유/독립성, 활동의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갈등과 경쟁의 개념을 비교·대조하면서 갈등을 정의한다(이창균 외, 2012 재인용). 가상준 외(2009)도 사회갈등을 양립불가능한 이해, 목표, 가치 등이 대립되는 상태로 당사자 간 적대적 인식, 심리 상태, 이에 따르는 물리적 충돌로 정의하여 맥을 함께 한다.

이 외에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의 과정에 중심을 둔 논의도 존재한다. 나태준·박재희(2004)는 사회갈등을 개인, 집단, 조직 내부 또는 이들 상호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으로 보고, 권력 등의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적 집단 간의 투쟁으로

간주한다. March와 Simon(1958)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있어 표준 메커니즘 장애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대안을 선택하는 데 곤란을 겪는 상황(임동진, 2010 재인용)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사회갈등은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평가가 갈리는 사회갈등에 대해 Robbins(2003)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전통적 견해, 행태적 견해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상호작용론적 견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전통적 견해는 갈등의 역기능을 강조한다. 갈등을 당사자들 간의 목표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충돌, 경쟁, 긴장 등으로 정의하며(Darendorf, 1971), 정책결정의 주체들이 정책대안을 선택 또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가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다(Minnery, 1985).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1940년 중엽까지 지배적이었던 관점이다. 다음은 행태적 견해로서 갈등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수용해야하지만, 갈등 관리를 통해 모두 해소해야 됨을 주장한다. 끝으로 긍정적인 측면의 상호작용론적 견해로서 갈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집단 내의 응집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이견의 투입을 통해 우수한 의사결정을 초래하며, 욕구 불만의 탈출구를 제공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다(Robbins, 2003).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Deutch(1973)는 갈등이 정체된 상태를 변화시켜 주고, 당사자들의 관심을 자극시켜 해법을 찾도록 도와주며, 사람과 사회의 발달과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았다.

한편, 사회갈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문기(2004)는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해 논하며 계층, 이념, 지역, 노사, 환경, 세대 갈등 등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윤인진(2011)도 유사하게 갈등의 유형을 계층, 이념, 지역, 노사, 세대, 정부-주민갈등으로 분류하여 갈등의 이슈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조원빈(2016)은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의 관계를 연구하며 갈등을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유희정·이숙중(2016)은 계층계급갈등, 공공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유형을 빈부격차 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개발·보존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종교갈등 이상 8가지로 범주화하여 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을 내포된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분류하였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더하여, 민주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념갈등의 유형을 도출하였다(최태욱, 2012; 조대엽, 2014; 박길성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하고, 사회갈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사회갈등을 이념갈등, 이익갈등, 가치갈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2) 주장형 정치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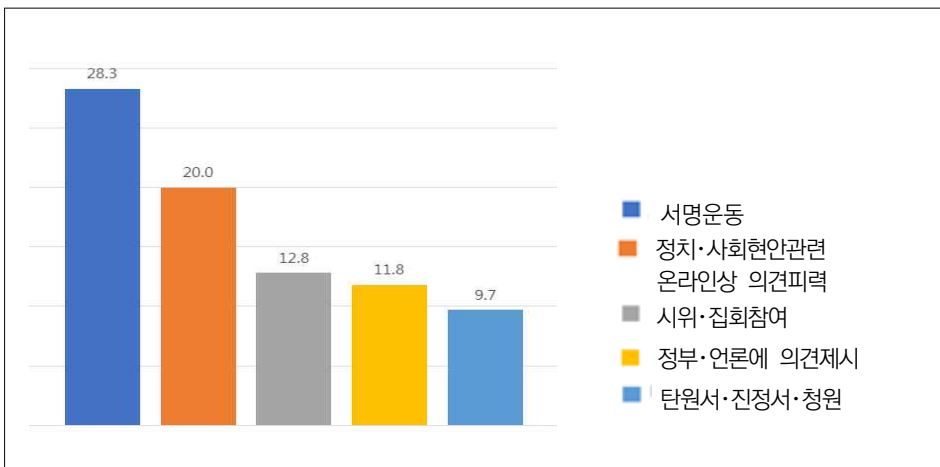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영향력이 확장되어 왔다. 일상에서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SNS의 발전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최지향, 2016).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시민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Huntington & Nelson, 1976)’, 즉, ‘공공관료들과 정치엘리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행동(Parry et al. 1992)’을 말한다. 정치참여에 대한 정의 및 정치참여의 범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학자별로 다르다. Weiner(1971)는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공공업무 행정에 영향을 주며, 정치적 지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는 모든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치참여를 정의하였다. Verba와 Nie(1987)는 정부 공직자 선출이나 이들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투표, 선거운동, 집합적 활동, 공직자 면담 등을 포함하였으며, 정부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한 행위가 아닌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등은 정치참여로 보지 않았다. 또한, Mibrath와 Goel(1977)은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주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을 정치참여로 규정하였으며, 정부에 대해 의례적인 지지 표명 등 비자발적인 행위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가 Verba와 Nie에 비해 넓다. Huntington 역시 정치참여의 범위를 넓게 바라본다. Huntington은 정치참여를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시민의 행위’로 보았으며, 그 범위에 대해 집단성, 계획성, 지속성, 합법성, 폭력성, 효과성 등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행위를 포함시켰다. Barnes 외(1979)는 Verba와 Nie에 비해서는 확장적이며, Huntington에 비해서는 좁은 범위에서 정치참여를 바라보았다(박찬욱, 2005). Barnes 외는 이러한 다양한 정치참여를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로 양분하기도 했다. 관습적 참여는 오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시행되어온 참여방식으로 투표 등의 형태를 말한다면, 비관습적 참여는 새로운 형태로 정부를 향해 대항하는 방식으로 탄원서 및 진정서 서명, 시위·집회, 불매운동 및 보이콧, 파업, 공공시설 점거 등의 참여행위이다. Rossenstone과 Hansen(2003)은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으로 정의하여, 사회의 분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상황에서의 사회갈등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주목함에 따라, 정치참여를 정책 형성, 결정, 집행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시민들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범위를 Barnes 외의 비관습적 참여형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선거의 경우 ‘정치라는 영역에서 주기를 가지는 일종의 사건(event)’이기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치참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사회갈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정치참여의 형태가 아니다(김태완, 2015). 비관습적 참여 중에서도 공동체 참여는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참여에 가깝고, 공직자 접촉과 같은 행위는 이해당사자의 문제해결 지향적 행정참여로 간주하여, 시민들의 의견 주장의 성격을 정치참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일반시민들이 갖는 사회갈등 인식이 이러한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표출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비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에 관한 문항이며, 이는 온라인 의견개진, 정부에 의견제시,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시위 등이다. 해당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비관습적 정치참여유형별 참여율



한국인의 정치참여율을 참여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특성은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표출성이 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항의적 성격에 국한되지 않고, 표현적 특성을 포함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장형(assertive) 정치참여로 정의한다. 주장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주장형 정치참여는 보다 온건한 의견피력과 항의적인 시위참여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는 김한나(2016)의 저항형, 표현형 정치참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¹⁾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한국시민들이 갖는 사회갈등 인식이 이러한 주장형 정치참여로 표출되는데 중요한 동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활용된 문항은 온라인의견 개선, 의견제시,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시위 등이다.

3)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갈등은 그 사회가 역동적이며 발전 중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이끌어 왔다(서문기, 2004). 사회갈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갈등, 불평등 인식 및 차이 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김남옥 외(2016)는 서명, 시위, 파업 동참 등의 정치적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면서, 사회 불평등 양상과 관련된 변수들로 갈등경험 및 사회적 거리감 등의 요인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환경문제 등에서 오는 사회구조적 불안감, 혹은 빈부, 노사, 직업 종사상의 지위 차, 학력 차, 세대 등에서 오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수준 및 지역, 빈부 등으로 인한 차별인식 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갈등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2014)은 사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찬욱(2005)의 연구결과 환경보존, 다양성, 탈물질주의 등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같이 특정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갈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또렷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치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자 그 성숙을 이끄는 영향요인으로 보아,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다.

1) 김한나(2016)는 정부신뢰와 내적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참여유형별로 연구하였으며, 참여유형을 제도적 참여, 저항적 참여, 표현적 참여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최소정의로 조작적 정의를 한 제도적 참여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정치참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상에 따른 저항적 참여, 동기에 따른 조작적 정의는 본 연구에 모두 포함하는 범위로 볼 수 있다.

2. 신뢰와 주장형 정치참여의 관계

1) 신뢰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갈등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허락하는 것이며(Putnam, 1994), 위험(risk)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행위가 반규범적이거나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감을 말하는 것으로(김은미 외, 2012), Fukuyama(2000)는 신뢰를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신뢰는 개인과 신뢰하는 대상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는 그 대상에 따라 '제도신뢰'와 '대인신뢰'로 구분 할 수 있다(Schaik, 2002; 이재혁, 2006). '대인신뢰'는 한 개인이 신뢰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사적 신뢰와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신뢰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김은미 외, 2012; 박희봉 외, 2009; Newton 외, 2011; Pagden, 1988).

사회신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즉,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사회신뢰는 어떤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나 제도를 믿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재완, 2013).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신뢰가 높은 사회는 공동체적 연대가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사회신뢰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일반화된 신뢰로서(Marschall & Dietilind Stolee, 2004; 유희정·이숙중, 2010 재인용), 협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Putnam, 1993)이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총칭되는 무형 자산이다(김남옥 외, 2016).

한편, '제도신뢰'는 사회 내 제도나 규칙에 대한 신뢰로, 공적신뢰, 정치신뢰, 정부신뢰 등의 개념과 유사하며(박희봉 외, 2009; 원숙연, 2001; Newton, 2001; Pagden, 1988), 정부신뢰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류현숙 외, 2008), 정부가 생산하는 각종의 산출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어떻게 잘 운용되고 있는가에 기초한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이다(Hetherington, 1999, 김찬룡, 2013 재인용). 정부신뢰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며 정부의 정당성을 제고하여 민주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amson 1968; Levi, 1998).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위임과 권한을 형성해 보다 과감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이 불신하는 정부는 국가 또는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어 정부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에 실망한 국민은 더욱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Citrin, 1974;

Miller, 1974; 류현숙 외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인식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해 줌에 있어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두 가지 신뢰변수를 분리해 분석하였다.

2) 두 가지 신뢰가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신뢰와 시민의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며, 신뢰를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본다(Knack, 1992). 본 연구에서는 신뢰 중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각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송경재(2013)에 따르면, 정부신뢰가 투표 등 관습적 참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Almond and Verba, 1963; 배귀회·임승후, 2009), 집회나 시위 등 비관습적 참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정부신뢰와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반대인 것이다(곽현근, 2007, 유희정·이숙중, 2010).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 경우,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부신뢰가 낮으면 시민들은 자신의 불만표출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행한다(Gamson, 1968; Hollander, 1997; Pollock, 1983). 낮은 정부신뢰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의 책임성을 요구하게 하고,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Yang and Callahan, 2005; 이혜인·홍준형, 2013 재인용). 유희정·이숙중(2010)은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낮은 정부신뢰가 집회·시위 등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킴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하나인 촛불집회의 정치적 효과를 연구한 유성진(2017)에 따르면, 정부신뢰가 낮은 원인이 특정정치인 및 정책결정자에 의한 경우 이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치참여가 활성화된다. 또한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낮아, 촛불집회와 같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정치참여는 정부 불신이 심화된 것의 결과로 해석한다(송현주 외, 2008).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정부신뢰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주장형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사회신뢰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신뢰는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1993a)은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 협력행위를 촉진해 단결된 집단행동을 하도록 만들며 지역사회에 민주주

의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Loflin(2003)은 사회자본이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신뢰는 참여행태와 상관없이 대개의 참여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연구된다. 즉, 전통적이거나 비전통적 정치참여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Montero 외, 1997; Dekker & Uslander, 2001). 국내연구에서도 투표와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와 시위, 공직자 접촉 등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각각에 사회신뢰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재, 2013; 이숙중·유희정, 2010). 이 외에도 여러 기존연구에서 사회신뢰는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분석되고 있다(곽현근, 2007b; 이곤수 외, 2007; 홍혜승·류은영, 2015). 사회신뢰는 기본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장려하는 바, 본 연구에서도 사회신뢰가 참여행태와 상관없이 다양한 정치참여를 이끄는 변수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3. 사회갈등 인식과 주장형 정치참여의 관계에서 신뢰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사회 불평등 및 갈등의 심화는 정부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Uslander and Brown, 2005; 김두환, 2006; 박순애, 2006; 이현수, 1999; 손호중 외, 2005), 이는 시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정치참여를 약화시킨다(강철희·이상철, 2013; 석승혜 외, 2015). 이를 바탕으로 정부신뢰는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시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정부에서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보기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감소된다. 반면, 사회갈등 인식이 높은 시민이 정부신뢰가 낮다면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 표출에 의지가 강화되어 주장형 정치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회신뢰는 사회갈등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력 및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이현수, 1999; Rousseau et al, 1998).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시민이 사회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사회적 갈등 및 불만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시민은 본인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행동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로 연결되는 데 중요한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4. 가설정립

본 연구에서는 앞선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사회갈등, 신뢰, 주장형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11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가설은 <표 1>과 같다.

〈표 1〉 가설 설정

가설1-1	이념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이익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가치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정부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정부신뢰는 이념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4-2	정부신뢰는 이익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4-3	정부신뢰는 가치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5-1	사회신뢰는 이념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5-2	사회신뢰는 이익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5-3	사회신뢰는 가치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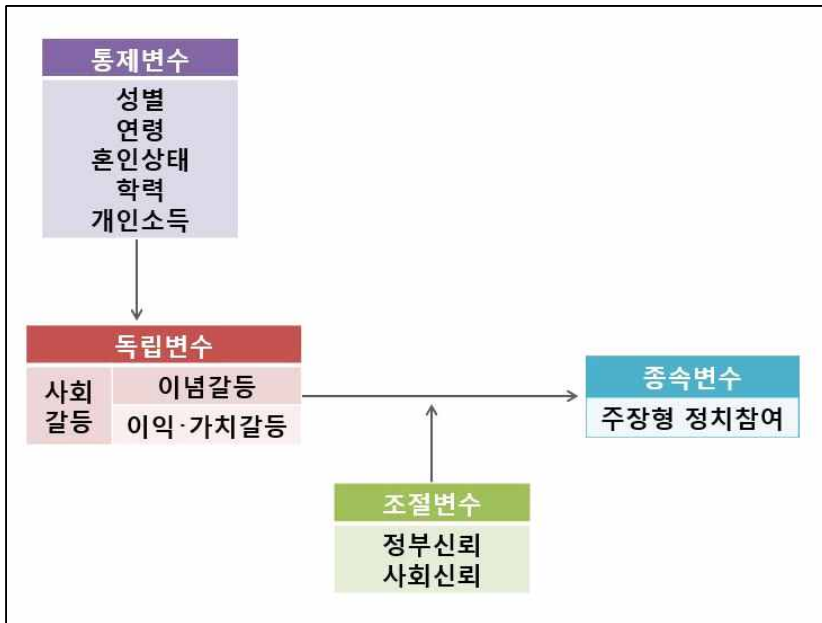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갈등이 시민들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앞선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²⁾ 먼저, 독립변수인 사

2) 본 연구모형은 초기 설계단계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을 이념갈등, 이익

회갈등이 종속변수인 주장형 정치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들 사이의 조절변수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를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에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개인소득을 포함시켰다.

〈그림 2〉 연구모형 설계



2. 변수의 측정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사회통합 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표 2>와 같이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을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으로 8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각 갈등에 대해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이념갈등, 이익·가치갈등으로 유형화하여 변수를 사용하였다.

갈등, 가치갈등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연구분석 단계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갈등 측정문항 중 이익갈등 문항과 가치갈등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갈등을 이념갈등과 이익·가치갈등 2가지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그림2>의 연구모형은 요인분석 후 수정된 변수를 반영한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의 모형을 따랐다.

종속변수인 주장형 정치참여 변수는 정형화된 투표 이외에 일상에서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인하고자, Barnes 외의 정치참여의 개념을 적용하여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해당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활용문항은 온라인 의견피력, 정부에 의견 제시,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시위 참여 등 총 5개이다.

조절변수로 활용한 신뢰변수는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로, 정부신뢰 변수는 6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신뢰 변수는 단일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표 2〉 변수들의 구성 및 문항 내용

구분	변수		지표
독립 변수	사회 갈등	이념갈등	SC1 빈곤층과 중상층 간
			SC2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
			SC3 근로자와 고용주 간
		이익· 가치갈등 ³⁾	SC4 수도권과 지방 간
	SC5 개발과 환경보존 간		
	SC6 고령층과 젊은층 간		
	SC7 남자와 여자 간		
	조절 변수	신뢰	정부신뢰 (6문항)
GT2 국회			
GT3 법원			
GT4 검찰			
GT5 경찰			
GT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사회신뢰		ST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종속 변수	주장형 정치참여 (5문항)	PP1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 피력 경험 여부	
		PP2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PP3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PP4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PP5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총 20문항

3) 이익·가치갈등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해당 변수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익갈등은 문항 2개, 가치갈등은 문항 3개로 측정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5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됨에 따라 변수를 이익·가치갈등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익갈등은 '수도권과 지방 간',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치갈등은 '고령층과 젊은층 간', '남자와 여자 간', '종교 간' 갈등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3. 표본 추출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목적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국 사회의 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의 각 영역별로 파악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본 연구에 활용된 2016년도 자료는 2016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조사되었다.⁴⁾ 조사대상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부터 69세 이하 성인 남녀로, 응답자는 총 8,00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Cook의 거리(Cook's distance)⁵⁾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7,254명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활용된 각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갈등과 정부신뢰 및 사회신뢰가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정부신뢰,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총 4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해당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남성 50.8%, 여성 49.2%의 응답자 성별 비율이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9.2%, 30대가 19.5%, 40대 23.4%, 50대 23.0%, 60대 14.9%이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25.6%,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7.9%, 사별과 이혼이 각각 3.6%, 3.0%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4) 본 연구를 위해 2016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조사시점인 2016년 9월-10월은 한국 사회에 사회갈등과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임을 반영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총 6회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 활용된 정치참여, 사회신뢰 변수는 2013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다(2016 사회통합실태조사).

5) Cook's distance는 최소제곱법 기반 회귀분석 시 데이터 포인트의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정치로, 영향력이 있는 데이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널리 이용된다.

12.5%이며, 고졸이 40.0%, 전문대 졸업이 17.3%, 대졸이상이 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의 경우, 취업 전 인구를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가 28.2%, 200만원 미만인 30.5%,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21.7%,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인 12.7%, 400만원 이상이 6.9%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683	50.8
	여성	3,571	49.2
나이	20대	1,396	19.2
	30대	1,414	19.5
	40대	1,696	23.4
	50대	1,666	23.0
	60대	1,082	14.9
혼인상태	미혼	1,857	25.6
	배우자 유	4,922	67.9
	사별	260	3.6
	이혼	215	3.0
학력	중졸 이하	906	12.5
	고졸	2,899	40.0
	전문대졸	1,260	17.3
	대졸 이상	2,189	30.2
개인소득	소득 없음	2,045	28.2
	200만원 미만	2,214	30.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75	21.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921	12.7
	400만원 이상	499	6.9
총계		7,254	100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사회갈등, 조절변수인 정부신뢰, 종속변수인 주장형 정치참여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이 동일 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적재량이 높은 변수 순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자 베리맥스

(Varimax) 회전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pm .50$ 이상인 경우 높은 유의성을 가지는데,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499에서 .871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MO=.854). 사회갈등을 이념, 이익, 가치갈등 세 가지로 분류한 것과 달리, 탐색적 요인분석의 과정에서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변수 별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수를 하나로 묶고 이익·가치갈등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수들의 일관성 확인을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각 요인별 변수의 신뢰도는 이념갈등(.665), 이익·가치갈등(.772), 정부신뢰(.894), 주장형 정치참여(.768) 모두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 활용된 문항들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분석결과는 <표 4>를 통해 정리하였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요인적재량	고유값	Cronbach α
사회갈등	이념갈등	SC2	.762	1.205	.665
		SC1	.726		
		SC3	.653		
	이익·가치갈등	SC7	.822	2.507	.772
		SC8	.777		
		SC6	.700		
		SC4	.544		
신뢰	정부신뢰	SC5	.499	4.550	.894
		GT3	.871		
		GT4	.855		
		GT5	.817		
		GT1	.793		
		GT6	.755		
주장형 정치참여		GT2	.721	3.032	.768
		PP2	.776		
		PP4	.774		
		PP3	.735		
		PP5	.715		
	PP1	.682			

3. 가설 재설정

앞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독립변수인 사회갈등 변수가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부 가설들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5〉 가설 재설정

가설1-1	이념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이익·가치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정부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정부신뢰는 이념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4-2	정부신뢰는 이익·가치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5-1	사회신뢰는 이념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5-2	사회신뢰는 이익·가치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4. 상관관계 분석

연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6〉은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념갈등	이익·가치갈등	정부신뢰	사회신뢰	주장형 정치참여
이념갈등	1				
이익·가치갈등	.502**	1			
정부신뢰	-.237**	-.161**	1		
사회신뢰	-.145**	-.079**	.230**	1	
주장형 정치참여	.126**	.098**	-.029*	.068**	1

* p<0.10, ** p<0.05

먼저, 독립변수인 이념갈등은 이익·가치갈등, 주장형 정치참여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신뢰, 사회신뢰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익·가치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부신뢰, 사회신뢰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신뢰는 또 다른 조절변수인 사회신뢰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주장형 정치참여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사이에는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적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였다.

5. 위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변수만 포함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이념갈등, 이익·가치갈등을 추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를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각 변수를 투입하는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수들을 평균중심화를 하여 활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변수의 투입 단계마다 각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가 투입된 1단계에서는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이념갈등, 이익·가치갈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정부신뢰, 사회신뢰를 투입하였으며, 정부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인 '이념갈등×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익·가치갈등×정부신뢰', '이념갈등×사회신뢰', '이익·가치갈등×사회신뢰'는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주장형 정치참여											
	Step 1			Step 2			Step 3			Step 4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VIF
성별	-.012	-.922	1.384	-.013	-.972	1.384	-.017	-1.329	1.388	-.019	-1.461	1.389
연령	-.104***	-6.405	2.079	-.098***	-6.087	2.082	-.107***	-6.608	2.104	-.103***	-6.406	2.106
혼인상태	-.020	-1.420	1.614	-.021	-1.481	1.614	-.020	-1.407	1.615	-.021	-1.479	1.616
학력	.178***	12.292	1.649	.177***	12.308	1.649	.169***	11.747	1.659	.171***	11.941	1.662
월평균소득	.050***	3.677	1.440	.050***	3.746	1.440	.049***	3.679	1.445	.047***	3.493	1.447
이념갈등				.094***	7.245	1.339	.108***	8.212	1.343	.109***	8.276	1.398
이익·가치갈등				.043***	3.281	1.339	.044***	3.420	1.394	.043***	3.280	1.363
정부신뢰							.017	1.444	1.130	.018	1.491	1.132
사회신뢰							.078***	6.703	1.075	.079***	6.828	1.083
이념갈등 x 정부신뢰										-.057***	-4.194	1.506
이익·가치갈등 x 정부신뢰										.047***	3.431	1.519
이념갈등 x 사회신뢰										.047***	3.447	1.535
이익·가치갈등 x 사회신뢰										.047***	3.455	1.527
R ²	.076			.091(↑0.015)			.098(↑0.007)			.107(↑0.009)		
수정된R ²	.076			.090			.097			.105		
F	120.063***			103.730***			87.150***			66.633***		

***p<0.01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조절변수 포함)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R² = .107)이 너무 낮다고 지적될 수도 있다.⁶⁾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종속변수에 대한 핵심 영향요인 탐색이 아닌, 사회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갖는 조절효과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력보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김호정, 2009).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조절변수 포함)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 모든 변수

6) 설명력(R²)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R²는 large(0.26 ≤ R²), middle (0.13 ≤ R² < 0.26), small (0.02 ≤ R² < 0.13)로 분류된다. Falk와 Miller(1992)의 기준에 따르면 R²값이 0.10 이상이면 설명력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0.107로 Cohen의 기준에 따르면 설명력이 낮으나, Falk와 Miller의 기준인 10%를 충족하여 본 연구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가 $p < 0.01$ 로 매우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6. 가설검증 및 결과 논의

앞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 8>과 같이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이념갈등, 이익·가치갈등 두 변수 모두 채택되었다. 둘째, 정부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사회신뢰는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또한 채택되었다. 넷째, 정부신뢰가 사회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이념갈등, 이익·가치갈등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채택되었다. 이념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는 약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졌으며, 이익·가치갈등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신뢰는 이념갈등과 이익·가치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8>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결과
가설1-1	이념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2	이익·가치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정부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	사회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1	정부신뢰는 이념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4-2	정부신뢰는 이익·가치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5-1	사회신뢰는 이념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5-2	사회신뢰는 이익·가치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념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념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념갈등은 집회, 파업 및 시위, 서명운동, SNS 활동 등의 다양한 형식의 주장형 정치참여로 표출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 현상을 충돌 및 제약으로

인식하거나 반드시 해소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적 대응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갈등에 대한 전통적 견해 혹은 행태적 견해와 맥락을 함께 한다.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 행위의 목적을 파악해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해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갈등 결과 표출된 주장형 정치참여 현상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그 행위가 위법적일 경우 정부는 더욱 표면적 문제 해결을 우선시했다. 위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 행위의 목적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논의하는 방식의 건설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이익·가치 갈등은 이념갈등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익·가치 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 프레임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 동안 사회 및 언론은 국내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로 이념갈등 프레임으로 해석하여 시민들의 참여적 행동을 이념적 행위로 치부하고 정치적 남남갈등 현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모든 사회갈등을 이념의 문제로 볼 수 없게 하는 결과로서, 시민들은 개인의 삶과 이익문제 및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을 표출하고자 참여적 행동을 함을 시사한다. 최근 청년임대주택 신축과 관련, 원주민들로부터 발생한 님비(NIMBY)현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쓰레기처리장, 화장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이익갈등 문제는 아주 크다. 작년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갈등 또한 이익갈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가치갈등인 된장녀와 한남으로 표현되는 여성/남성 혐오 현상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나타난 여성혐오에 대한 지적은 최근 일어난 미투(Me Too)운동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는 주장형 정치참여를 통해 표출되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편견 없이 대응해야 한다. 즉, 각 시민의 이익과 가치 요인에 의해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셋째, 사회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신뢰는 익명의 타자인 시민들에 대한 신뢰로서, 이는 개인이 의견이나 입장을 주장하는 것보다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나 단체를 통해 표출되는 의견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다. 이처럼 높은 사회신뢰는 시민들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서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사회신뢰는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협력과 연대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부신뢰는 시민들의 이념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념갈등은 앞서 보았듯이 주장형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정부신뢰가 있으면 이러한 영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정부를 신뢰해 지지하는 경우 이념갈등이 있다 해도 자기주장을 하거나 항의하는 행위를 자제하게 만든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정부신뢰는 이익·가치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익·가치갈등의 많은 부분은 법적·정책적 최종 결정론자인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가치갈등을 높게 인식해 주장형 행위에 참여할 때 정부신뢰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어 더 주장형 행위에 참여하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두 가지 가설 채택의 결과, 정부를 신뢰하면 이념갈등에 따른 참여는 줄어들고 이익 및 가치갈등에 따른 참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시민들이 정부를 이념갈등의 중재자보다는 이익이나 가치갈등의 조정자나 해결자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시민들의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이념갈등과 이익·가치갈등이 증대시키는 주장형 정치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도 사회신뢰 수준에 따라 주장형 정치참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시민은, 보유한 사회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장형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신뢰 수준이 낮은 시민이라면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여기더라도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진 채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불만요인을 내재된 상태로 내버려두기보다는 시민들의 건강한 정치참여를 통해 관리가능하게 해야 하는 만큼, 사회신뢰 구축의 문제를 단순히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념갈등이 증대시키는 주장형 정치참여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신뢰는 이념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약화시킨 반면, 사회신뢰는 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권한위임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신뢰가 높으면 정부가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주장형 정치참여를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는 사회신뢰가 연대 및 협력을 통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형 정치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보인다. 즉, 이념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의 관계에서 정부신뢰는 개인의 주장

형 정치참여의 필요성 인식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신뢰는 개인의 주장형 정치참여의 실행력을 연대 및 협력을 통해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V. 결론

사회갈등이 드러날 때 민주주의는 발전하며, 더욱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사회갈등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주장형 정치참여는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는 사회갈등이 시민들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관계에서의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갈등, 정부신뢰, 사회신뢰, 주장형 정치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8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총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갈등과 시민의 참여적 행동 간의 관계 연구에 있어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한 참여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열띤 토론을 벌이고 특정 집단을 옹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최근 반려견을 둘러싼 갈등은 온라인상에서 주민의 안전 측면과 동물복지 관점 간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개인 간 또는 작은 집단 간 사회갈등이 공감이나 연대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가져오는 동조화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는 사회갈등을 시민들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사회갈등이 급진적 집단행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게 된다. 따라서 사회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사회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개 갈등을 해결해야할 문제요인으로 본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상호작용론적인 효과의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확인했다. 이는 사회갈등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함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사회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 신뢰의 조절효과를 연구함에 있어, 협력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신뢰와 주장형 정치참여의 대상이 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념갈등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의 차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넷째, 사회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서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사회불만 요인의 극단적 표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묻지마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등의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 요인에서 기인한 자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심리적 지원 및 교육 형태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적 대응에서 더 나아가 사회신뢰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회신뢰가 사회적 불만이 개인에게 내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참여의 형태로 표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근거로 사회신뢰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횡단면자료만을 활용함에 따른 한계를 가진다. 또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단답형 문항을 통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더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갈등 인식 변화에 따른 정치참여 변화를 비교해봄에 따라, 그 인과관계를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이 낮다는 한계를 가진다. Falk와 Miller(1992)의 설명력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R2값이 0.10 이상이면 설명력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과학연구에 있어 일반적으로 Cohen(1988)의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다소 아쉬운 수준이다.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지나, 이와 같은 설명력의 한계로 볼 때 후속 연구에서 더욱 정교한 모형 및 설문 설계를 통한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갈등 변수들은 상위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념갈등은 보수-진보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으로, 이익·가치갈등은 지역갈등, 개발/환경보존 간 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종교갈등으로 세분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요인들을 묶어서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하위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가 사회갈등과 정치참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안순철·임재형·김학린. (2009).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세션: 갈등관리: 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1990~2007.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1): 239-271.
- 강철희·이상철. (2013).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1-28.
- 곽현근. (2007a). 개인수준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년 지방선거·2004년 총선·2002년 대선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5-30.
- 곽현근. (2007b).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분석: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229-259.
- 금현섭·백승주. (2014). 소득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1): 141-168.
- 김기동·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2): 5-39.
- 김남옥·석승혜·장안식. (2016). 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감소하는가?. 「사회와이론」, 28(1): 33-67.
- 김두환. (2006).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에서 갈등해소 영향요인의 종합적 개념 모형. 「공간과 사회」, 26: 88-119.
- 김문길. (2017).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5(0): 37-49.
- 김은미·정일권·배영. (2012). 누구와의 교류인가? 인터넷을 통한 교류의 범위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6(5): 44-77.
- 김은정. (2015). 불평등인식 및 정치신뢰의 정치참여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박영만·고병현. (2011). 민간경호·경비원의 갈등관리가 리더신뢰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7(2): 150-159.
- 김재신·김강민. (2011). 시민사회 갈등인식과 정부신뢰: 공공갈등 평가와 전망, 정부신뢰간의 관계. 「한국지방행정학보」, 8(1): 164-177.
- 김진호. (2007). 군사안보시설 현지화를 위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제주해군기지 건설논쟁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47: 65-103.
- 김찬룡. (2013). 스포츠참여가 사적·일반 대인신뢰, 사회신뢰,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

- 학회지」, 52(4): 75-89.
- 김태완. (2015). 시민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5(4): 47-67.
-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조건: 정치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1): 81-110.
- 김호정. (2009). 갈등과 신뢰 및 조직효과성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3(1): 97-119.
- 나태준·박재희(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下』. 서울: 논형.
- 류현숙·이재호·최호진·홍재환. (2008). (Web 2.0 시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추진전략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박길성. (2013).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정치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2): 73-97.
- 박정은·원영애·최은영. (1994). 초기노인여성의 정치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 박희봉. (2006).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1-23.
- 박희봉·이희창(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105-128.
- 박희봉·이희창·김동욱·김철수·박병래. (2003).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12(3): 199-227.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1(4): 1421-1449.
-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석승혜·장예빛·유승호. (2015). 한국의 중도집단은 탈도덕적인가?. 「한국사회학」, 49(5): 113-149.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2018). 2018 동아시아 갈등협력 국제인식조사(한국, 일본, 대만, 태국).
-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 수거물 처리장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 송현주·나은경·김현석. (2008). 공론장과 집단행동의 변화.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
- 신상준·이숙중.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0(2): 1-37.
- 원숙연. (2001). 신뢰의 개념적 다차원성과 영향요인의 차별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 257-273.
- 유민이·문상호·이숙중. (2012).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111-145.
- 유성진. (2017).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한국과국제정치」, 33(4): 1-25.
- 유재원·이승모. (2006). 한국의 시민접촉: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행정학보」, 40: 53-72.
- 유희정·이숙중. (2010a). 정치참여가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정책학회보」, 19(3): 29-57.
- _____. (2010b).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_____. (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39-80.
- 윤인진. (2011).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 2007년과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분쟁해결연구」, 9(2): 135-166.
-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 이근수·송건섭. (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 이부형. (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이숙중·유민이. (2013). 정치참여가 공적권위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8(1): 53-86.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3): 25-43.
- 이재완. (2013).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화 행정연구」, 24(3): 189-223.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61-98.
- 이준용. (2015).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배정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균·강인재·라휘문. (2010).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효율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현수. (1999).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33(2): 37-56.

이혜인·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25(3): 791-822.

임동진. (2010).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임유진. (2010). 갈등 해소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갈등 유형, 제3자 역할, 사과가 신뢰와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6): 229-260.

정건화. (2007).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71: 11-50.

정규호. (2007). 정책갈등의 참여적 해결을 위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미와 과제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91-119.

정순정. (2012). 시민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주진. (2010).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대화과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은 가능한가)』. 서울: 아르케.

정태환. (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갈등』. 서울: 일신사.

조대엽. (2014).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파주: 나남.

조원빈. (2016).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정치정보연구』, 19(1): 209-241.

최지향. (2016). SNS 이용과 정치참여. 『한국언론학보』, 60(5): 123-144.

최태욱 외. (2012). 『갈등과 제도』. 서울: 후마니타스.

아주경제. (2017). “[한국경제, 갈등을 극복하라] 사회적 갈등비용으로만 GDP 27% 낭비”, 8월 7일.

한국행정연구원. (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홍혜승·류은영. (2015).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 131~155.

Almond, Gabriel A. &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rthur H. Miller.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Barnes Samuel H., Kaase Max & Associates.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2): 505-507.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99-1023.

Citrin, J.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73-988.

Claus Offe. (1985). Disorganized Capitalism: Contemporary Transformations of Work and Politics, *The MIT Press*.

Cohen, J. O.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Dahrendorf, Ralf.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ekker, Paul. & Eric M. Uslander. (2001).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Deutch, Morton.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 New Haven, CO: Yale University Press.
- Eric M. Uslander. & Mitchell Brown. (2005). *Inequality, trust, and civic engagement*, Marylan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Falk, R. F. & Miller, N. B. (1992). *A Primer for Soft Modeling*, Akron: Ohio University of Akron Press.
- Fukuyama Francis. (2000).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IMF Working Paper*, 00/74.
-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 Dorsey Press.
- Hetherington, M. J. (1999). The effect of political trust on the president vote, 1968-1996.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2): 311-326.
- Huntington, Samuel P. & Joan M. Nelson.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wis A. Coser. (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Glencoe, IL: Free Press.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Loflin, Katherine Torres. (2003).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nd their Relationship to Community and Political Civic Engagement*.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March, J.C. & Simon, H.A. (1958).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 Margaret Levi. (1998). *A State of Trust.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ilbrath, L. W. &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E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Minnery, J.R. (1985). *Conflict Management in Urban Planning*. Aldershot: Gower.
- Montero, J. R., Cunther, R. & Torcal, M. (1997). Democracy in Spain: Legitimacy, Discontent, and Disaffection.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2(3): 124-160.
- Newton, K. & Zmerli, S. (2011). Three forms of trust and their association.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2): 169-200.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Pagden, A. (1988). The destruction of trust and its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case of eighteenth-century Naples.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127-141. Oxford: Basil Blackwell.
- Parry, G., Moysen, G. & Neil Day.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Washington, DC: The American Prospects*, 4(13): 35-42.
- Putnam, R. D., Leonardi, R., & Nanetti, R. Y.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yner, S. (1988). Muddling through metaphors to maturity: a commentary of Kasperson et al,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Risk Analysis*, 8: 201-204.
- Robbins, S. P. (2003). *Organizational behavior (7th ed.)*. New York: Prentice-Hal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Longman.
- Rousseau, D.M., Sitkin, S.B., Burt, R.S. and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Ton van Schaik. (2002). Social capital in the European values study surveys. *OECD Report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Measurement*.
- Schmidt, Stuart M. and Thomas A. Kochan. (1972). Conflict: Toward Conceptual Clari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3): 359-370.
- Sirianni, C., & L. Friedland. (2001). *Civic Innovation in America: Community Empowerment, Public Policy, and the Movement for Civic Renewa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sskind, L. (1999).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 London: Sage.
- Thomas, K. W.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89-935. Chicago: Rand McNally.
- Verba, S., & N. H. Nie. (1987).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 Social 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rba, S., K. L. Scholzman., & H.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iner, M. (1971). Political participation: crisis of the political process. *Crise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 159-20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Influence of Social Conflict on Citizen's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and Social Trust

Youngra Lee & Sookjong Le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social conflicts on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by citizens based on the premise that citizens in a democracy would raise their critical voices when they view social conflicts as high.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how government and social trust moderate this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s and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2016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deological conflicts and interest or value conflicts increase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social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promoting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ird, trust in government weakens the positive influence of ideological conflicts on promoting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social trust strengthens it. Fourth, both trust in government and social trust are found to enhance the positive influence of interest or value conflicts on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itizens engage in assertive actions through networks and sense of solidarity when social trust is higher. Government trust also tends to increase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when they view interest or value conflicts as high.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trust reduces such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ideological conflicts. This difference suggests that Korean citizens expect their government to resolve interest or value conflicts more actively than ideological conflicts.

【Keywords: Social Conflict, 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rust in government, social trust, Moderating Effect】